

주간 통일정세

2014-47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북한 "남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희세의 파쇼악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안법은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왕래)과 접촉, 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 거래를 하는 것까지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으로 범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정 66주년을 맞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반인권·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난함.
 - 또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철폐가 없이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도, 북남관계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보안법이 더욱 살기를 풍기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범의노조 통보 등을 그 예로 들.
 - 이어 신문은 1일 '정당활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통진당에 대한 괴뢰집권세력의 강제해산책동은 사상 유례(전례)없는 파쇼적 난동"이라고 주장함.
- 북한 "북남대화 파국은 남한 책임"…거듭 비난(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대화 간판 뒤에 숨겨진 비수'라는 글에서 "결과 속이 판판 다른 괴뢰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망동 때문에 북남 관계는 개선을 맞이했다가도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올해 초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제안과 합의, 이어진 2월의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의 노력으로 꼽으면서, "괴뢰들이 뼈라 살포와 북침 합동군사연습으로 '맹약'을 저버렸다"고 비난함.
 - 이어 지난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두 번째 개선 노력으로 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인권 소동'과 '호국훈련', '맥스썬더훈련' 등으로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함.
 - 또 신문은 '초강경 대응의 철폐를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도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 '반북 인권소동'에 앞장섰다고 "북남관계를 대결

야망 실현의 농락물로 삼으면서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추후도 용납할 수 없다" 2일 주장함.

- 이어 신문은 '헛된 망상, 어리석은 개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통일 재원 마련 프로젝트 '통일 향아리' 사업에 대해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대결을 통해 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괴뢰 패당의 책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2일 비난함.

■ 북한 '종북 논란' 신은미 옹호..."진실 알린 것"(12/6,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6일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의 공화국 방문소감은 동족 대결의 광풍이 몰아치는 남조선 땅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라고 주장함.
- "반공사상을 갖고 있던 신 씨가 북한에 다녀온 뒤 현실을 경험하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며 "진실은 도주자(탈북자)들이 앵무새처럼 외워댄 증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동포·외국인의 꾸밈없는 평가에 있다"고 매체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없애(12/6,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으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되었다고 6일 전함.
 - 이어 매체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앞으로 공업지구에서 노동생산 능률을 더 높이고 공업지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며 민족 공동의 번영과 균형적 발전을 더욱 추동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 이어 관련, 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6일 보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김여정 방남 추진' 주장...통일부 "진위 확인필요"(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내년 3월 서울에서 북측과 음식문화 축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남경연) 회장이 4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보낸 의향서에 김여정이 (참가자 중에 있고, 직책은) 대외사업부 부장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이와 관련하여, 남경연은 지난 10월 북측 낙원총무역회사와 함께 11월에 서울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요건 미비로 반려되었으며, 당시 남경연이 가져온 북측의 의향서에 김여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덧붙였다.

- 북한 종교단체 '한기총 애기봉 트리 점등계획' 비난(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종교단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트리 점등 계획은 신성한 종교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불상사까지 몰아오는 반민족적·반통일적·반인류적 범죄"라고 주장했다고 4일 보도함.
 - 담화는 애기봉 등탑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남북대결을 부추긴 '심리모략전의 수단'이었다며 한기총이 "종교인의 신앙심과 민족적 양심마저 버리고 반공화국 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한기총을 '사이비종교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 추진위원회, '2015년은 조국해방 70돌,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이며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북과 남의 노동자들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내년에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동선언문 발표(12.1, 중앙통신)
- 새누리당의 '북인권법' 제정 추진 등 우리 정부의 '북인권문제' 제기에도 대해 "정치사기극, 극악한 동족대결광란" 등으로 연일 비난과 '우리(北)가 벌리는 초강경대응전의 기본대상'이라고 위협(12.2,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CBS방송(11.30)을 인용하여 '남조선에 에이즈감염자가 8,6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12.3, 중앙통신)
- '남조선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대북정책의 가장 뚜렷한 발로'라고 비난하며 '그 어떤 날조와 기만으로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을 수 없다'고 주장 (1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정윤희 사건' 관련 우리 언론사들의 보도를 인용보도하며 '권력을 개인 향락 추구의 필수적 수단으로 여기는 괴뢰집권세력에서 부정추문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그것이 파멸을 재촉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비난(12.4, 중앙통신)
- 남한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국민 과반이상 남한 사회 불안, 세월호 참사 등 불안 요인으로 人災 등) 인용, '남한 사회를 인권동토대, 인권불모지'라며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벌일 한 조각의 체면도 없다"고 주장(12.5, 평양방송)
- 합동참모본부 관할 下에 사이버사령부를 두려는 것에 대해 '곤경에 처한 괴뢰패당이 위기탈출을 노리고 생각해 낸 공여지책'이라고 비난 (12.6, 중앙통신)
-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3차회의(12.2)에서 한 발언(북한 인권문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에 대해 "망발"이라며 '미제의 반공화국 대결각본에 따른 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2.7,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북 인권' 연내 안보리 의제 채택 추진에 대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도발행위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적 망동'이라고 비난(12.7,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소니사 해킹은 우리 지지자의 의로운 소행"(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소니사)해킹 공격은 우리의 반미공조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지지자·동정자의 의로운 소행이 분명할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소니가 미국땅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무슨 못된 짓을 저질러 봉변을 당했는지는 모른다"며 '북한 해킹설'을 부인함.
 - 이어 남측이 미국에 동조해 이번 해킹 사건을 근거 없이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미국에 무턱대고 아부하다가는 세계적 판도에서 벌어지는 반미성전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 무서운 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러시아 편들기... "제2냉전, 미국 패배할 것"(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격화되는 러미 대결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관계를 짚으며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함.
 - 신문은 최근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초계비행 확대 등 군사적 조치를 열거하며 "이러한 대응 조치들은 미국의 반(反)러시아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초기부터 모든 책임을 러시아에 씌워 비방하며 국제적 여론전을 조성했다고 주장함.
 - 또 "러미 관계를 냉전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며 "기나긴 싸움에서 패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는 점 한가지는 명백하다. 오늘의 세계에서 패권주의, 지배주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북한, '인권결의' 주도 일본 "영영 없어질 존재"(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쫓대 없이 놀아대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일 일본 반동들이 쫓대 없이 지금처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돌격대로 계속 나서는 경우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면전에서 영영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을 연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함.
 - 이어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은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함.
 - 또 일제 시대 미성년의 나이로 '소년근로봉사대'에 강제동원됐던 북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소개하며 "미국 못지않게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라고 비난함.

- 북한 "식민통치 만행 일본과 계산할 것 너무 많다"(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제 주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조작'한 일본이 과거 진행된 북일 간 회담·교섭에서도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에 적대적인 태도로 응대했다고 지적함.
 - 논평은 "우리는 일본의 이성 있는 정치가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일(북일) 간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려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지만 일본은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일본의 이같은 태도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먼 나라로 되고 있다"며 일제 식민통치 만행으로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경고함.

- 북한 "참다운 인권 여기 와서 배우라"...인권공세 반격(11/23, 통일신보: 11/27, 12/1, 노동신문: 12/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장 리건과 직원 변영금을 출연시켜 북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소개하며 "김정은 원수님의 인덕정치에 의해 장애자 보호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작년 11월 '장애인보호법' 개정,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이동수리봉사', 장애인 선수단의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청각장애인 축구팀의 오는 13일 호주 친선경기 참가 등을 성과로 열거함.
 - 통일신보는 11월 23일자 평양육아원의 김정희 원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평양육아원·애육원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며 "참다운 인권이 무엇인지 여기에 와서 보고 배우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또한 노동신문은 11월 27일자 기사에서 남한 노인들의 높은 자살률을 거론하며 남한을 '인권의 불모지'로 매도했으며,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희세의 파쇼악법"으로 비난함.
- 북한, 인권결의 EU 연일 비난... "독자성 어디갔나"(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유럽의 독자성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EU를 '미국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난 유럽동맹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이어 2007년 EU가 독자적인 위성위치시스템(GPS) 개발을 위한 '갈릴레오 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쫓대있는 정책을 실시할 듯이 광고하며 등장한 유럽동맹(EU)의 영상(이미지)과 체면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고 비난함.
 - 논설은 아울러 미국이 자국주재 유럽 대사관이나 국가수반들을 상대로 '정탐'이나 '도청'을 했다고 하며 "유럽동맹은 그 누구의 인권을 논하기에 앞서 자기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감행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미, 다음달 싱가포르서 '1.5트랙' 접촉 모색"(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미국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1.5 트랙' 방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린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 측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 북한, 소니 해킹설 부인... "해킹 금지 국제규범 준수"(12/4,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관계자가 VOA에 북한을 소니 해킹에 결부시키는 것은 북한을 겨냥한 "또 하나의 조작"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최근 미국 영화사 소니를 상대로 벌어진 대규모 해킹에 대한 관련설을 부인하고 나섰다고 4일 보도함.
 - 이어 방송은 북한의 관계자가 북한은 이미 해킹과 해적판 등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했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북한 장애인 축구팀 13일 호주서 친선경기(12/3, 조선중앙방송; 자유아시아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장애인 지원단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리건 부장과 변영금 부원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북한 장애인 축구팀이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친선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3일 보도함.
 -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청각장애인 축구팀이 호주 측의 초청을 받아 오는 13일 시드니 올림픽경기장에서 호주 청각장애인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한다고 전했으며, 이번 경기는 호주 청각장애인 축구팀이 6개월 전 북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한 이후 양측 당국간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고 3일 보도함.

- 헤이글 前 美 국방장관의 '국방 혁신 구상'(로봇기술과 무기소형화 등 첨단기술을 군사분야 적극 도입) 발표 관련 '군사적 패권을 통해 세계 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야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날로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고 비난(12.1,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일 라오스 대통령(뽌말리 싸이나손)에게 '라오스 건국' 39주년 축전 및 '北-라오스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 강조 (12.2, 중앙 방송·중앙통신)
- 쿠바 「혁명무력절('56.12.2)」 즈음 기념 글을 통해 '쿠바 인민의 反美·反帝의 사회주의 수호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 표명(12.2, 중앙방송·노동신문)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강석주(黨 비서), 12월 2일 이임 駐北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과 담화(1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駐韓美軍 대상 '기지촌 성매매'와 '日 성노예 범죄'를 거론 "성노예 범죄국들이며 인권유린 표본국들"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저들의 특급범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역사에 없는 최대의 비화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비난(12.3,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12월 3일 이임 駐北 러시아 대사과 담화(12.3,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11.20, 北 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비난)을 12월 2일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 공식문건 'A/69/616, S/2014/849호'로 배포 (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에서 '인종차별 시위('퍼거슨市에서 백인경찰의 흑인청년 사살 촉발') 사태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라며 '국제인권재판관 행세' 조소(12.5, 중앙통신·노동신문)
-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는 최악의 사태가 수시로 조성되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이라고 재차 비난(12.6,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 호위사령부 포병부대 시찰·훈련 독려(12/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정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과 함께 윤정린 호위 사령관과 김성덕 육군 상장 등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최고지도자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직속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직속 포병중대를 시찰하고 실전 분위기의 강도 높은 훈련을 독려했다고 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군인들의 질문과 대답 방식으로 진행된 '전문훈련'을 참관하고 "군인들을 무기, 전투기술기재에 완전히 정통하고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한 명사수, 명포수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훈련을 비롯한 각종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맹렬히 벌여야 한다"며 "군인들이 튼튼한 체력을 갖추도록 기계체조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2일 2면에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윤정린 호위 사령관과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을 연출한 기념사진을 게재했으며, 조선중앙TV 2일 방송에서도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활짝 웃는 얼굴로 윤 사령관을 잡아당기듯 팔짱을 낀 모습이 포착됨.

- 북한 김정은 또 동계훈련 부대 시찰...‘싸움준비’ 독려(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제1위원장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최귀헌 상장과 함께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1313부대'를 시찰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은 이 부대의 권총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올해는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해였다면 다음해는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전군이 싸움 준비 완성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는 해, 그 어떤 강적도 단매(한방)에 때려부술 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에 전투대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어 작전계획을 검토한 자리에서는 지휘관들에게 "싸움 준비에서는 내일이 없다는 자각을 안고 싸움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음을 전함.
 - 또,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부대의 오중흡정치대학강실, 훈련관도 둘러보고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부대 산하 '조재현영웅중대'를 방문해 군인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봤다고 덧붙임.

- 북한 김정은, 메기양어장 시찰...양어산업 질책(1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을 대동하고 메기 양어장인 '5월9일메기공장'을 방문해 양어산업 전반이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질책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5월9일메기공장이 생산공정의 과학화로 한 해 수백t의 메기를 생산하는 점을 치하하고 이 공장과는 달리 다른 메기공장들이 아직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당에서 양어를 중시하면 양어에 달라붙고 수산을 중시하면 바다로 나가는 일꾼들의 오분열도식(얼마 못가 호지부지되는) 사업방법 때문"이라고 질타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이 공장에서도 "노력(노동력)과 생산 면적을 늘리지 않고 다음해부터 100t이상의 메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며 '컴퓨터에 의한 종합조종체계' 구축, 선진 양어기술 수용 등을 강조했다고 덧붙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북한 '장성택 근거지' 노동당 행정부 권능 조직지도부로"(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장성택 처형의 후속작업으로 그가 수장으로 있던 당 행정부를 중앙과 도(특별시 포함), 시·군 당 단위까지 모두 없애고 중앙과 지방 당 조직부에 행정부의 권능을 가진 '7과'를 신설했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소식통이 "기존 중앙 당 행정부와 도 당 행정부, 시·군 당 행정과에 있던 간부와 직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지방의 말단 관료나 노동자로 좌천됐으며 '7과'는 전원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당 행정부의 권능을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굳이 '7과'로 지은 것도 장성택을 연상시키는 '행정부'라는 말 자체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고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김정은, 10월 아픈 몸 이끌고 '과학중시' 사상 역설(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과학은 사회주의 기관차'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지난 10월 완공을 앞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도 당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발언과 행동을 소개하며, "그이(김정은)의 과학중시 사상은 과학기술이 철두철미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애민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당시의 김 黨 제1비서에 대해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셨던 그날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서 한 대상을 돌아보시고는 '또 봅시다!'라며 다른 대상으로 향하시던 원수님"이라고 찬양하며, 김 黨 제1비서를 수행하던 간부들이 "너무 무리하신다", "날이 저물어간다"며 무리한 시찰을 만류하자 김 黨 제1비서가 "그럼 날이 어둡기 전에 과학자들과 사진을 찍고와서 또 돌아봅시다!"라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고 덧붙임.
 - 이어 신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젓더미에서 조국을 이끌고 사회주의 대문으로 날아오른 (1950~1960년대의) 천리마 기수들처럼 이 나라를 강성국가의 대문에 하루빨리 들어서게 하자"고 호소함.
- 북한, 장성택 숙청 1주년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다짐(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3면에 실린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걸어온 승리의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 따라 끝까지 이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며, 오는 8일 장성택 숙청 1주년을 앞두고 '배신'과 '변절'을 경계하며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신문은 옛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편' 바람에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쫓버리고(내팽개치고)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 신념이 떨떨한 자들도 나타났다"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작년 11월 양강도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방문해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밝힌 점을 상기시킴.
 - 이어 신문은 '마두산의 구호문헌'이라는 글을 통해 마두산 혁명전적지에서 발견됐다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또한 신문은 1일 2면에 실린 '주체혁명 위업의 새 시대를 펼치신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제목 아래 1970년대 김정일 위원장의 젊은 모습이 담긴 컬러 사진 11장으로 가득 채우고, 1면에는 북한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최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동상 사진을 크게 실음.

- 이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보낸 3년이 "그리움 속에 흘러온 세 해"라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도덕의리'를 강조함.
- 북한, 김정일 3주기 맞아 '선군정치' 계승 강조(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로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12월17일)를 맞아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계승을 강조하며 결집을 촉구함.
 - 신문은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지난 3년간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연전패승을 이룩했다"며 "모두다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자"고 호소함.
 - 또 "원수님(김정은)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고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며 '수령결사옹위'가 선군의 핵심이며, "모든 문제를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입각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빈곤펀데기산 물려주는 건 죄악"...산림조성 독려(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지금이야말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 운명과 잇닿은 중대사로 여기고 누구나 한몸을 내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산림 조성 운동을 거듭 독려함.
 - 사설은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평양 중앙양묘장 시찰 발언을 언급하며 "산림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후대에 빈곤펀데기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고 지적하고 "나무 한그루라도 더 많이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역설함.
 - 사설은 또 산림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북한 현실에서 "강성국가건설 속도가 빨라질수록 목재와 섬유, 종이 등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보장하는 귀중한 자원인 산림의 몫이 대단히 커진다"며 최근 지속된 홍수와 심한 가뭄으로 인한 자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산림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빨리 자라고 경제적 이용 가치가 큰 나무들을 계단식으로 많이 심어 하루빨리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산림 조성 방식도 제시함.

- 北 국방위 성명(11.23)지지 군민대회, 김책시 등을 비롯한 각지 시, 군들에서 진행(12.1,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향국(女, 함흥시 성천강구역)에게 '100살 장수 생일상' 전달(12.2,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비전향장기수 '리공순'에게 80회 생일상 전달(12.3, 중앙통신)
- 김정일 사망(2011.12.17) 3주기 즈음 '사회주의 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해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고 초강도의 현지도 강행군을 단행하며 주체100년의 총공세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칭송 및 '김정은의 선군혁명 영도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것'을 강조(12.6, 중앙통신)
- 김일성 父子 현지도표식비·혁명사적표식비 준공식, 성천갑문사업소·농업 과학원 감자연구소·혜산신발공장·강계목장에서 진행(12.6, 중앙통신)
- 김책수산사업소, 연간 수산물 생산계획 초과(106.2%) 수행(12.7,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홍남공업개발구 소개...**"합영 개발 추진"(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함경남도 함흥시에 보세가공·기계설비제작·화학제품 생산 등을 위주로 하는 **홍남공업개발구**가 건설된다고 이곳을 "전망이 좋은 공업개발구"라고 치켜세우고, 해외동포·외국인의 투자를 독려함.
 - 통신은 **홍남공업개발구**의 1차 개발 면적은 2km²이며 북한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홍남공업개발구**의 장점으로 편리한 교통과 인접한 함흥공업지대 등을 꼽음.
 - 이어 통신은 개발구에 **마전해수욕장과 마전호텔**도 있어 관광업도 유망한 분야라고 덧붙임.

- 북한, '김일성김정일기금' 쓰임새 확대... "경제 협력"(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7일 김일성김정일기금 이사회의 김철호 부이사장이 산하에 있는 총회사를 통해 북한이 주체사상의 국제적 전과를 위해 조성한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일부로 "해외 동포 및 외국인들과의 투자 유치, 경제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금수강산' 12월호를 인용해 보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관광 오세요"...북한, 관광 특화 웹사이트 개설(11/29, 통일신보: 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1일 '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이라는 이름의 대외용 웹사이트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 웹사이트는 '내나라'나 '우리민족끼리' 같은 기존 대외용 웹사이트와 비슷하게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 관광에 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1일 보도함.
 - 이와 관련, 통일신보는 11월 29일 기사를 통해 '조선의 오늘'이 평양 '모란봉편집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연합뉴스는 웹사이트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관광지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홍보함은 물론, 항공노선과 철로, 입국 절차, 관광 코스, 숙박시설, 평양친선병원 등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과 조선민조보험총회사의 관광보험 서비스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관광총국을 비롯한 중앙 관광기관과 백두산여행사와 나선여행사 같은 지방 관광기관의 전화와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도 공개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나진-하산 본계약 내년 정도 예상…北, 적극 의지(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나진-하산 물류 협력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시베리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포항에 도착했으며, 1일 하역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본계약이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거쳐 내년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1일 보도함.
 - 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1일 기자과의 인터뷰에서 "본계약을 금년 안에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내년 정도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협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필요하면 시범 운송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음을 덧붙임.
 - 이어 점점 당시 현장 분위기와 관련,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측 모두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초 예정보다 하루 이른 27일 밤 10시께 출항하게 됐다"며 "특히 북측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관계로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치를 적용 중인데 점검단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전함.

- 나진-하산 프로젝트 합작사 경영권, 러시아가 행사할 듯(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3사 컨소시엄이 국영기업인 러시아철도공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특수목적법인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인 라손콘트라스(2008년 북한과 러시아가 3대7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북·러 합작기업)의 러시아 측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며, 최근 우리 기업 컨소시엄이 49%, 러시아철도공사가 5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각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합작기업의 경영권을 결국 러시아 측이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최근 러시아산 석탄 시범운송으로 결실을 본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사업 주도권을 확보할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임.

- 자강도 중소탄광관리국 탄광들, 석탄 생산성과(생산계획 1.2배 수행) 선전 (12.1, 중앙방송)
- 선경건재공장(평양시 통일거리)에서 생산되는 수지관(난방관 등)과 색철판 지붕재료(5월1일경기장 등 시공)의 '내구성·시공편리성 및 주요건축물 시공사례' 등 소개 선전(12.2, 중앙통신)
- 검덕광업연합기업소(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 13수직갱 대보수공사를 4달 동안에 끝내고 운영 시작(12.3, 중앙방송)
- 北, 「조선녹색후원기금」 설립(12.4,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새로운 대형 '수격 펌프' 개발(12.4,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53호(12.2), 문천식료공장에 '3중3대혁명 붉은기' 수여(12.5, 중앙방송)
- 2014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다수확품종 알곡작물들과 비료 등 과학기술자료)·발표회(120여건 과학기술성과자료), 12월 3일~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창립 62주년 기념 과학연구성과전시회(270여건 과학연구 성과자료), 12월 2일~5일까지 현지 진행(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천내지구 등 각지 중소탄광에서 연간 석탄생산계획 112% 초과 완수 및 석탄공업성 중소탄광국에서 150여개 탄광 개발(12.5,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김정은, 외국담배 흡연 금지령...“애국심 없다” 질책(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지린성 옌벤(延邊)의 조선족 대북무역 사업가의 소식을 인용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근 간부들에게 '외국담배 소비 금지령'을 내리면서 북한의 양담배 수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 보도함.
 - 뉴스는 이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국내에서 나오는 담배도 좋은데 왜 애국심 없이 외국담배를 피우냐"며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덧붙임.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조선신보에 일반인 리설주 등장... '동명인 추방' 거짓? (12/1, 조선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일 조선신보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기처녀' 5회분 동영상에서 지난 8월 열린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참가한 평양역 직원 김설미씨를 소개하며 그의 직장동료 중 한 명인 '리설주' 씨를 인터뷰 했으며, 화면 하단에 '평양역 부원 리설주'라는 자막도 함께 넣어 방송했다고 1일 보도함.
 - 뉴스는 "리설주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명이인 여성들이 평양에서 추방됐다"고 주장한 자유북한방송의 지난달 보도와 달리, 조선신보에 일반인 '리설주'의 인터뷰 동영상이 게재됨에 따라 자유북한방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임.

마. 사회 동향

- 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민족 긍지감 줄 것"(12/1, 조선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가 북한이 신청한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를 등재했으며,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성공한 것이라고 1일 보도함.
 -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1일 진행된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인터뷰에서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비물질유산처 박무송 부처장이 "(이번 등재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사람들에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 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북한 AFC 집행위원 "메시, 평양에 초대하고 싶어"(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FC 시상식에서 북한 여성 체육인 한은경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이 유명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를 평양국제축구학교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2일 보도함.
 - 뉴스는 한 집행위원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수를 물었더니 모두 '메시'라고" 답했으며, 또 "모든 학생들이 카카나 메시처럼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어한다"며 "이들은 메시에 대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모든 경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메시가 초대를 받아들여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둘러본다면 북한이 축구실력 향상을 위해 들이는 노력에 감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덧붙임.

- 조선신보 "북한에는 에이즈 감염자 없다"(1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1일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에 참가한 스테판 과울 조스트 북한 주재 WHO 대표가 축하 연설에서 "조선에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통제 활동의 결과로 평가했다고 3일 보도함.
 - 신보는 황철 중앙위생방역소 과장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이 진행한 각종 에이즈 예방 통제 활동을 소개하고, "WHO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에 단 한명의 에이즈 감염자도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전함.

- "北 대학생 치아 열악...인도적 지원 절실"(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가 4일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 설립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이병무 평양과기대 치과대학 설립 학장이 "(북한) 대학생들의 치아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북한은 치과 치료가 없어 그냥 (문제 치아를)뿔고 있다"고 전했다며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현실을 4일 보도함.
 - 뉴스는 이어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이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남북 협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북한, 여자축구 대표선수 리은심 띄우기 눈길(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체육강국 건설의 선구자집단 1번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여자축구 대표팀 주장인 리은심 선수의 성장기와 선수로서의 활약상을 자세히 소개하며 라 선수를 '용감무쌍한 무적불패팀의 주장'으로 치켜세움.
 - 신문은 라 선수가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의 연약한 둘째딸로 태어났지만 고열에도 연습을 하다 쓰러지는 등 열의와 노력이 남달랐으며, "나이는 제일 많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높이 세워진 훈련과제 수행으로 팀 전체를 불러일으킨 대오의 기수"라고 평가함.

- '국제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12월 3일 '강하국(보건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진행(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12월 3일 '김영훈(체육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 빙상관에서 진행(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성 김 미국 6자회담대표 4일 방한 (12/03,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양담당 부차관보가 오는 4일 한국을 찾는다고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했음. 국무부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한국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
 - 김 특별대표는 오는 8일 일본으로 이동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담당 국장과 만나고, 9일에는 일본 관리들과 미·일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어 김 특별대표는 1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중국 관리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나. 미·북 관계

- "북미, 다음 달 싱가포르서 '1.5트랙' 접촉 모색" (12/04, 연합뉴스)
 -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3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1.5 트랙' 방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했다.
 - 북한 측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설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측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데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공식으로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북한 "소니사 해킹은 우리 지지자의 의로운 소행" (12/07,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소니사) 해킹 공격은 우리의 반미공조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지지자·동정자의 의로운 소행이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대변인은 소니가 '최고존엄(김정은)'의 암살 시도를 다룬 영화 '디 인터뷰'를 제작한 곳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소니가 미국땅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무슨 못된 짓을 저질러 봉변을 당했는지는 모른다"며 '북한 해킹설'을 부인했음.
 - 미국 매체들은 지난달 29일 '디 인터뷰'의 개봉을 앞둔 소니사의 대규모 해킹 사건을 보도하며 이 사건을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북한은 유엔주재 대표부를 통해 이를 부인해왔음.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북한, 인권결의 주도 일본·EU 싸잡아 비난 (12/02,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과 유럽연합에 대해 미국을 '맹종'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EU가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21세기 EU가 세계의 독자적인 극으로서의 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서기를 원한다면 대외정책 집행에서 맹종맹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음.
 - 이어 북한은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정상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정탐행위'를 했다며 "유럽동맹은 자존심도 없는가"라고 반문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쫓대없이 놀아대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을 거칠게 비난했음. 신문은 "일본 반동들이 쫓대없이 지금까지 미국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돌격대로 계속 나서는 경우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면전에서 영영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음.

마. 러·북 관계

- 북한, 러시아 편들기...“제2냉전, 미국 패배할 것” (12/01,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에도 미국을 비난하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높임. '격화되는 러미 대결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관계를 짚으며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음.
 -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지난달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정치·경제적 유대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신문은 이날 '반인종주의 시위의 소용돌이 속에 몸부림치는 인권 불모지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소요 사태를 지목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에 역공을 펼쳤음.

바. 기타

- “올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 6개국 불과” (12/02, 연합뉴스)
 -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제재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호주, 덴마크, 요르단, 몽골, 필리핀, 영국 등 6개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2일 보도했음.
 - 제출된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의 수출입 통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유엔 제재 이행 현황이 담겼음.
 - 회원국들은 보고서에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관련 법률이나 조치를 토대로 이행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 "인권 결의안 수용 못한다"…반 총장에 서한 (12/03, 연합뉴스)
 - 유엔 사무국은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자성남 북한 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과 첨부 문서를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시켜 달라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이 서한에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음.
 - 또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은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결의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음.
 - 이 성명은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안보리, 북한인권 의제 상정 전망…10개국 촉구서한 발송 (12/6,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호주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10개 이사국이 5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상황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음.
 - 유엔 안보리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 충분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돼 안보리 의제로 올라간다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특사는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음.
 - 특히 의제 상정문제를 놓고는 상임이사국들이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상황이 정식 의제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서한은 호주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리퍼트 "한미동맹으로 동북아 안정·평화 증진" (12/01,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1일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열린 환영회 및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활용해 한국을 더욱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비확산, 국제보건, 테러리즘 같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튼튼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주한미국대사로 재임하며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국민들과도 함께 협력하면서 이 위대한 유산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음.
 - 리퍼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양국 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선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버나드 샴포우 미 8군사령관,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한철수 한미우호협회장 등 양국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음.

- 미 태평양사령관 내정자 "북한군 격퇴 준비돼 있어" (12/03,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내정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전방에 배치 또는 주둔 중인 서태평양의 미군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확약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지할 것"이라면서 "대북 억지가 실패할 경우 태평양사령부가 북한군과 싸워 격퇴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군은 지금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덴만 등지에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한·미동맹은 앞으로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리스 내정자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보좌관 "한미동맹 현대화...냉전적 체제 아냐" (12/03,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의 에반 메데이로스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권력과 미국 동맹'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미·중 관계의 기원은 소련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협력한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두 나라의 사이가 아무 관련도 없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더 관련성이 높아져 미·중 두 대국이 다양한 지역적, 글로벌 도전에 맞서 협력해야 필요성이 커졌다"고 역설했음.
 -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다극화 시대와 연결지어 동맹을 냉전적 사고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각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안보문제 등을 해결하는 다자적 협력체 등을 구성하기 때문에 동맹은 오히려 다극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 6자회담 재개 놓고 미묘한 온도차 있다 (12/05,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5일 서울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처음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대북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율을 벌였음.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고 진지한 방식으로 우리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협상으로 급히 돌아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서 건설적 방향으로 이행해 갈 수 있다는 강력한 표시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 반면 우리는 "북한이 구체적 어떤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야 우리가 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차이가 있었음.

- 미국 새 국방장관에 애슈턴 카터 지명 (12/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카터 전 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새 국방장관에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지명을 발표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카터 지명자는 전략적 관점과 기술적 노하우를 고루 갖춘 인물"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를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혁신가"라고 평가했다.
 - 그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행정부 초기인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담당 차관보로 일하면서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과의 핵 협상에 관여했다. 과거 북한을 2차례 방문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오가면서 대북 정책을 조율해온 '한반도통(通)'으로도 평가받았다.

나. 한·중 관계

- 주한중대사 국회서 '사드반대' 발언, 주권침해 논란 (12/01,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국회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 26일 국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한중관계 악영향 우려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명백히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국회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면서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권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분명히 맞다"면서도 "주한 중국대사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그렇게 주권침해이고, 모독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외교의 여러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 아니냐"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다. 한·일 관계

- **차대통령 "日, 위안부 국장협에서 진정어린 제안하길" (12/0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회담 개최 후 오히려 한일관계가 후퇴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문제 논의) 국장급 협의에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 등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카키바라 회장이 "민간교류 촉진은 경제외교의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회담 실현을 희망한다"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박 대통령은 이밖에 접견에서 양국간 최종소비재 교역 확대,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 투자환경 개선을 소개하며 일본 기업의 투자를 당부했다.

- **정부 "日, 위안부 소녀상 철거주장 앞서 해결책 내야" (12/02,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와 미국의 위안부 기림비에 대해 철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일본은 철거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국장급 협의에서 소녀상과 기림비에 대해 철거 주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협회의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일본 내 일각에서 (철거를) 주장하는 소녀상 및 기림비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 문제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또한 반인륜적 행위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주한 일본대사관, '일왕 생일행사 문제' 보도에 항의 (12/04, 연합뉴스)
 -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일부 언론이 4일 저녁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일왕 생일 축하 리셉션을 문제시하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동아일보 측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동아일보는 4일자 신문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음.
 - 일본대사관은 이번 보도로 축하 리셉션 개최를 항의하는 사태 등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 앞서 일본대사관은 지난 7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열려다가 여론의 반발로 호텔 측이 행사 진행 취소를 통보하자 대사관저에서 기념식을 대신 개최했음.

라. 한·러 관계

- 러시아 부총리 "한국과 극동개발 협력 강화 희망" (12/04, 연합뉴스)
 - 극동 지역 개발을 전략적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로서의 능력을 갖춘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크게 강화하길 바라고 있다고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3일(현지시간) 밝혔음.
 - 그는 "한국 기업들이 현재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개발지역'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오랫동안 논의돼온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러시아산 가스의 북한 경유 한국 공급 사업, 동북아 국가 간 통합 전력망 구축 사업 등에도 한국 측의 참여를 촉구했음.
 -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8일 부산에 도착해 경남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둘러보고, 같은 날 서울로 이동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9일에는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포럼도 개최할 계획임.

- **오룡호 선원 시신 7구 수습…사망 27명·실종 26명 (12/05, 연합뉴스)**
 -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 선원 7명의 시신이 5일 추가로 수습됐으며,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선원은 한국인 6명, 동남아 21명 등 27명으로 늘었음.
 - 정부는 현재 우리 국적 선박에 실린 시신을 해상에서 러시아 운반선으로 옮겨 부산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파견단은 러시아 구조조정본부 측과 협조, 국제협력을 통해 실종자 수색, 시신 수습, 사고 현지 조사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정부가 사고해역에 파견하기로 한 해군 초계기 2대는 영공통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6일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음.

마. 미·중 관계

- **"미국, 중국 부패관리 검거작전에 협조하기로" <뒤웨이> (12/04, 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의 국외 도피 탐관(부패 관리) 검거작전인 '여우사냥'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뒤웨이가 3일 보도했음.
 - 중국 정부는 이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연례 미·중 사법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탐관들의 최대 도피처라면서 이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음.
 -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외국으로 도피한 중국 관리는 2만 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7천여 명이 미국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의 도피 자산은 8천억위안(1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음.
- **오바마 "시진핑 조기 권력공고화…인접국 우려도 불러" (12/0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 시일에 권력을 공고하게 했다고 평가했으며 시 주석 집권 이후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영유권 갈등 등으로 인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들의 이해관계와 강력하게 들어맞는다고 본다. 내가 중국을 공식방문한 게 양국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사례"라고 말했으며 국의 목표도 중국과 '원-원' 할 수 있는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러려면 사이버 안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절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역사·문화 전통, 사회제도, 발전수준이 다른 양국간에 다른 생각과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양국간 공통 이익은 언제나 갈등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 미국 의회, 對대만 군함 판매법 통과…중국 반발 예상 (12/06,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상원이 대만에 군함 4척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군함이송법안'을 지난 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6일 보도했음. 미국 하원도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에 이어 지난 4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대만에 대한 군함 판매는 이제 미국 행정부의 심사·승인만 남게 됐음.
 - 중국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국방부는 지난 4월에도 미국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의 핵심이익을 진실하게 준수하라"며 강력히 항의한 바 있음.
 - 이런 가운데 중국군사과학원 원장을 지낸 류징쑹 상장(上將·대장격)이 최근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음.

바. 미·일 관계

- "오바마-아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연기 합의" <교도통신> (12/0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할 때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양국의 애초 계획에 관해 "최종하지만, 내년 봄 이후가 어떻겠습니까"라며 연기를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관한 이해의 뜻을 표명했음.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올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에 인식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사. 미·러 관계

- 러시아 정보당국자 "러시아 경제난은 서방 공작 산물" (12/06, 연합뉴스)
 - 러시아 뉴스 전문채널 '러시아 투데이(RT)'는 미하일 프라드코프 SVR 국장이 지난 4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의도적인 경제 제재, 국제 유가 조작을 통한 루블화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총리 출신인 프라드코프 국장은 이어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하려는 미국의 기도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미국의 그런 기도는 기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그는 또 30%에 달하는 국제 유가 하락도 부분적으로 미국 공작의 산물이며,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가격 급락은 결과적으로 루블화 가치 폭락 압력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달러에 대한 루블화 가치는 39% 떨어졌음.

아. 중·일 관계

- "중일, 에너지절약·환경회의 2년 만에 재개" <마이니치> (12/04, 연합뉴스)
 - 중국·일본 정부가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여파로 중단된 양국 에너지·환경 회의를 2년여 만에 재개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이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일 에너지절약·환경 종합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음.
 - 이번 회의에는 중국 측에서는 왕양 부총리와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상과 환경상이 각각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대국적·장기적 관점에서 21세기 중일 관계의 존재 방식을 찾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후 중국 측이 포럼 재개 의사를 일본에 전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 리커창, 일본 방문단 면담...“중일 관계 중요” (12/05, 연합뉴스)
 -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신(新)중일우호21세기위원회'의 일본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 닛폰유세이 사장 등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40분간 접견하며 "중일 관계는 양국과 지역의 평화나 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 리 총리는 또 "서로 불리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웃끼리의 사침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대국적·장기적인 시점에서 의욕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발언대응을 전했다.
 - 일본 언론들은 이날 면담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리 총리가 일본 요인의 예방을 수용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인권결의안' 비난 군민대회 보도록 전기 공급(12/1,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가뭄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는 '군민대회' 뉴스 등은 시청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음.
 - 양강도 소식통은 1일 "요즘 대부분의 공장들에 전기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들이 보도를 볼 수 있도록 뉴스 시간대에 1, 2시간 정도 전기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인민반 회의에서는 '보도(뉴스)를 보라고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대는 조선중앙TV의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되는 시간으로, 뉴스는 김정일 사망 3주기관련 추모 분위기 조성 소식과 최근 각 지역별로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비난하는 군민대회 소식을 전하고 있음.
 - 북한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수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 이 때문에 북한 최대 광산인 무산광산은 물론 일부 공장 기업소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임.
 -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정에 일부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김정일 애도기간에 맞춰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또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비난 군민대회를 보여주면서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한 적대의식과 반발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북한 "북남대화 파국은 남한 책임"…거듭 비난(12/2,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대화 간판 뒤에 숨겨진 비수'라는 글에서 올해 들어 두 차례의 남북관계 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남한 정부의 '대결 망동'으로 파국을 맞았다고 책임을 돌렸음.
 - 신문은 올해 2월의 이산가족 상봉과 지난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북한의 개선 노력으로 든 신문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인권 소동'과 '호국훈련', '맥스썬더훈련' 등으로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음.

- 신문은 '초강경 대응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도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 '반북 인권소동'에 앞장섰다고 "북남관계를 대결야망 실현의 농락물로 삼으면서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추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북한, 인권결의 주도 일본·EU 싸잡아 비난(12/2,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논평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을 '맹종'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음.
- 논평은 EU가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했으며, EU 측이 "결의는 결의대로 통과시키고 그 후에 가서 대화를 하자"고 답한 것에 대해 EU의 독자성 등에 회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
- 이어 북한은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정상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정탐행위'를 했으며 "유럽동맹은 자존심도 없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음.
- 또한 노동신문은 2일 '쫓대 없이 놀아대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을 연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음.
- 신문은 "만일 일본 반동들이 쫓대 없이 지금처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돌격대로 계속 나서는 경우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면전에서 영영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음.

■ "북, 말레이시아와 노동자 파견 협력"(1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노동당이 말레이시아 집권 여당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지난달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당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양해각서에는 통일말레이국민기구 텡쿠 아드난 사무총장과 박근광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각각 서명했으며, 북한이 말레이시아 측에 먼저 우호협력 강화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음.
- 특히 지난달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판투 탄광 폭발사고 때 북한 광부들이 현장에서 작업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파견 확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제기됨.

- 정글지역 탄광을 중심으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해 말레이시아인들이 기피하는 작업장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임.
 - 하지만 이번 탄광 폭발 사고를 계기로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려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가 재조명되는 상황임.
- 영국 외교부 "내년 초, 북한 언론인 초청 인터넷 교육"(12/2, 미국의 소리)
- 영국 외교부 바로니스 아닐레이 부장관은 북한 언론인들에게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영국 외교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냐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내년 초에 북한 언론인들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영국 외교부는 2014/15 회계연도에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툼슨재단'에 자금을 제공해 북한 언론인들에게 인터넷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 언론인들에게 국제 보도관행과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발전에 대해 가르치는 것임.
 - 이미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북한 언론인 46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으며, 아닐레이 부장관은 다음 단계로 내년 초에는 북한 언론인들을 영국으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 "인권 결의안 수용 못한다"...반 총장에 서한(12/3, 연합뉴스)
- 유엔 사무국은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과 첨부 문서를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시켜 달라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 이들 문서는 북한이 이미 밝힌 입장을 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미가 있음.
 - 자 대사 명의의 서한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 사회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맞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북한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음.
 - 또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은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결의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음.

- 자 대사의 서한에 첨부된 문서는 결의안 채택 직후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성명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임.
- 북한,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日 연일 비난(12/3,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3일 '제 주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음.
 - 신문은 "우리는 일본과 계산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친추에 용서받지 못할 한을 남긴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비난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일본 반동들이 미국의 '인권공세'에 적극 가담하여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일본반동들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구실로 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오히려 우리의 주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면서 "그때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니 일본은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한다"고 위협했음.
- 북한 "참다운 인권 여기 와서 배우라"...인권공세 반격(12/3,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장 리건과 직원 변영금을 출연시켜 북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소개하며 "김정은 원수님의 인덕정치에 의해 장애자 보호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이어 작년 11월 '장애자보호법' 개정,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이동수리봉사', 장애인 선수단의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청각장애인 축구팀의 오는 13일 호주 친선경기 참가 등을 성과로 열거했음.
 - 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고아시설인 평양육아원·애육원 건설장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듯이 보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음.
- 북한 "식민통치 만행 일본과 계산할 것 너무 많다"(12/3,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3일 '제 주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조작'한 일본이 과거 진행된 북일 간 회담·교섭에서도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에 적대적인 태도로 응대했다면서 북한을 비난함.

- 논평은 "우리는 일본의 이성 있는 정치가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일(북·일) 간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려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지만 일본은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일본의 이같은 태도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먼 나라로 되고 있다"며 일제 식민통치 만행으로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경고했음.
- 투명성기구 "북 4년 연속 최악부패국"(12/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3일 발표한 '2014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북한을 4년 연속 전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함.
 - 국가별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북한이 올해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정부 관료, 경찰, 군인 등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북한은 8점으로 최하점을 받았음.
 -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의 스리라크 프리페트 아태지역 연구원은 노동당 등 북한 당국의 간부급들과 결탁한 생존형 부정부패가 심하다면서 부패와 관련한 사법체계의 부실과 식량과 물자 부족 등 사회, 경제적 환경이 북한을 최악의 부패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음.
 - 부패인식지수는 여러 국제평가기관들의 '정부 기능 관련 뇌물 제공 정도' '뇌물 부패 만연 정도' '공공부패의 심각성'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산정해왔음.
 - 북한은 2011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되었는데 첫 해인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지목됐음.
- 北, "미군, 남한여성 100만 성노예 삼아" 의혹제기(12/4, 뉴시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러시아인터넷통신 '이노스미 루'는 '100만 명의 성노예들: 미군의 남조선주둔 60여년의 결과'를 보도했다"며 미군 성범죄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
 - 통신은 "미군기지에 강제로 끌려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육체를 깡그리 짓밟힌 불우한 인생들, 미 행정부와 남조선 당국으로부터 사죄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난당한 여인들의 영혼이 아직도 한을 안고 배회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사회의 진모습"이라고 꼬집었음.

- 또 "이와 같이 조선민족과 인류에게 역사에 있어본 적 없는 특대형 인권범죄를 감행한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등을 내세워 골격을 만들고 맹종 맹동하는 성원국들을 추동해 대조선 인권결의를 통과시킨 것은 저들의 인권죄행을 가리고 음모와 날조로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판했음.
- 北, 몽골에 근로자 2천명 파견... "섬유, 농업분야 종사"(12/4, 노컷뉴스)
 - 몽골의 고위 외교관은 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몽골의 한반도 외교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북한 근로자 2천여 명이 몽골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북한-몽골 협정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이 몽골의 섬유,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대 4천 명까지 파견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의 규모가 계속 늘고 있고, 몽골 업체들은 성실하고 값싼 북한 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 외교관은 "북한 근로자들은 협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고 휴일에는 몽골의 변화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런 배경 때문에 몽골은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길 원하지만 북한 당국이 1년을 고집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음.
 - 그러나 매년 북한인 2천 명이 새로운 정보와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몽골 정부는 북한 광부를 포함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전했음.
 - 한편 이 관리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몽골 외교부의 바트바이어 츠딩단바 정책기획국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몽골의 우려를 전하면서도 "몽골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북한, 인권결의 EU 연일 비난... "독자성 어디갔나"(12/4,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4일 '유럽의 독자성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유럽연합(EU)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유럽의 '독자외교' 전통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EU를 비난하고 있음.

- 신문은 EU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쫓대있는 정책을 실시할 듯이 광고하며 등장한 유럽동맹(EU)의 영상(이미지)과 체면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고 비난했음.
- 아울러 미국이 자국주재 유럽 대사관이나 국가수반들을 상대로 '정탐'이나 '도청'을 했으며 "유럽동맹은 그 누구의 인권을 논하기에 앞서 자기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감행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2. 북한 인권

- '첫발은 뗐는데'...북한인권법 주무부처 논란(12/1,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최근 법안심사소위에 부처진 새누리당의 제정안에서 인권위의 역할이 배제되면서 그간 어느 부처나 기관보다 법안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당혹감에 빠졌음.
 - 지난달 21일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에 자신의 존재가 배제된 것을 확인한 인권위는 "권고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북한인권 주무기관은 인권전담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반발 모드로 돌아섰으며, 1일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형식을 통해 북한인권법 관련 권고를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음.
 - 북한주민 인권 업무만 떼어 통일부로 이관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 모두를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업무를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도 어긋나고 인권의 보편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주장임.
 -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권고가 국회의장에게만 전달되고 개별 의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부터라도 직접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인권위의 역할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음.

- 2013년 5월 라오스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2명 처형, 7명은 수용소로"(12/2, 동아일보)
 -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1일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돼 과문을 낳았던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2명이 처형당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북한 내부의 정보 협력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 박 이사장은 "(2명은) 올해 8, 9월경 처형됐으며 그중 1명의 이름이 문철(24)이라고 이 협력자가 알려졌다. 나머지 7명은 올해 봄에 북한의 14호 수용소에 수용됐다고 한다"고 전함.
 - 박 이사장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봄이 되기 전에만 해도 이들 9명은 동해 쪽 초대소, 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구호소, 교화소 등 모두 4곳에 분산 수용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수용소로 보내진 나머지 7명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북한은 당초 이들을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차대통령 "北인권 통일한국 미래위해 반드시 개선돼야"(12/2,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동혁 "수용소 출신 아니다" 北 주장 반박(12/2, YTN)
 - 신동혁 씨는 오늘 YTN '호준석의 뉴스인'에 출연해 북한 관영매체에 나와 자신이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고 말한 아버지를 직접 만나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게 해줄 것과 중립적 사찰단과 함께 자신이 태어난 14호 수용소를 방문해 진실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음.
 - 신 씨는 열네 살 때 발목이 족쇄에 채워져 12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흔적과 갈고리로 찍힌 자국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고 영국 의료진에게 검증도 받았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용소 현장에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음.

-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8~19일 처리 전망"(12/3, 연합뉴스)
 -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결의안 채택이 오는 18~19일께 이뤄지며, 이를 전후해 안보리 공식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18~19일이 될 것 같다"고 밝혔음.
 -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문제는 "(성탄절 연휴가 있는) 그다음 주는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일정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음.
 -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하고 우리 및 여타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중"이라고 밝힘.

- 남북관계발전특위, 남북대화재개 촉구 결의안 의결(12/3, 연합뉴스)
 -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음.
 - 특위는 결의안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식량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없는 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아울러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회도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의함.

- "국민 91%, 김정은 정권 신뢰안해"(12/4, 연합뉴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 35.6%, '어느 정도 심각'이 41.2%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음.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5%),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2.1%)이 많았고, '북한 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체소'(10.3%)와 '북한인권법 제정'(6.4%) 등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이밖에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조건 하에서만 지원해야 한다'(65.0%)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으로는 '변화없을 것'(62.8%)이라는 답변이 다수였음.

-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1월 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 (응답률 11.9%)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포인트임.
 -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개최한 운영·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고, 남북 인권대화 공식 제안 및 '과도기 정의'를 원용한 북한인권 침해 처리방안 수립을 제안했음.
- 정기국회 물건너간 北인권법, 연내 입법화 가능할까(12/4,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기초적 의견교환만 했을 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임.
 -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음.
 -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양당 안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합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음.
 - 그러나 외통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여러 상이한 점이 많아서 법제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음.
 - 새누리당 지도부는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새정치연합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음.
- 윤병세 "北인권, 안보리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뤄질것"(12/4, 연합뉴스)
- 영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주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이 많은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내내 결의안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권 결의안을 비난하기 위해 평양에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규모의 쉼기 대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가늠케 한다"고 지적했음.

■ 안보리, 북한인권 의제 상정 전망...10개국 촉구서한 발송(12/6,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특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5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힘.
- 이번 서한은 호주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킹 특사는 안보리 절차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된다고 하며, 10개 이사국이 서한을 보낸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이는 올해 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더욱 의미 있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 그는 "미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남한 내의 여러 개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일부 성공적 활동을 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올바른 명칭은 독도"(12/7,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관련 입법활동에 많은 지렛대를 주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북한 관리들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H.R 1771)이 올해 말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만일 법안이 올해 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일본이 북한과 납치자 문제를 협상하면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한 데 대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통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독자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아야 하며 대북 송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3. 탈북자

- 캐나다, 올 9월까지 탈북 난민 수용 "0"(12/1,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달 말 발표된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에 따르면 497명의 난민 심사대상 탈북자 중 단 한 명도 난민지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고문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캐나다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김 고문은 캐나다의 인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캐나다 북한인권협회의 이경복 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캐나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전·현직 이민장관 등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음.

- 미국, 지난달 탈북 난민 5명 수용(12/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2일 갱신한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의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 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총 176명이 됐음.
 - 미국의 회계연도별로 보면 2014 회계연도에 8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도착했고, 2013년에는 17명, 2012년에는 22명, 2011년에는 23명, 2010년에는 8명, 2009년에는 25명 등으로 대부분 연 평균 20여 명 안팎임.
 - 북한인권위원회(HRNI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인 올해까지 불과 200명도 안 되는 탈북자를 수용한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탈북자들의 원활한 미국 정착을 위해 직업교육 등 기본적 자립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재미 탈북민 연대(NKinUSA)의 조진혜 대표는 탈북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카드나 식량 구입권 등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탈북자들과 언어 소통이

용이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신속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탈북 친구 중국 공안에 신고" 앙심 흥기 휘둘러(12/4, 연합뉴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탈북자 친구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중국 공안에 신고한 탈북 브로커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탈북자 한 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4일 오후 탈북 브로커인 탈북자 김모(36)씨를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옆구리를 흥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
 -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나와 탈북하려던 친구를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바람에 친구가 공안에 잡혀가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를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작용했던 것 같다"며 "한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 "큰돈 벌게 해줄게"...탈북자 올린 사기범(12/5, YTN)
 -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역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탈북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65살 윤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교회에서 만나게 된 탈북자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음.

- '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수집 탈북女 징역 2년(12/5, 연합뉴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5일 국내 거주 탈북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회합·통신 등)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 모(4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음.
 - 김 씨는 2011년 국내 입국 후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음.

- 김 씨는 신병 치료차 중국에 있는 사촌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꾀에 빠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 이렇게까지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음.
- 재판부는 "탈북과정에서 한국으로 온 경위가 석연치 않지만 이번 범행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집 정보가 실제 북한에 보내지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 이산가족

- 미 서부 한인 2명 북한서 가족 상봉...이례적 가정 방문(12/3, 미국의 소리)
 - 한인 실향민 단체가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해 한국계 미국인 2명이 북한을 방문해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음.
 -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진용(77) 씨가 가족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이번 방북은 한인 실향민 단체가 북한 당국과 직접 협의해 성사시킨 첫 가족 상봉 사례가 되었는데, '북가주 이북5도민 연합회' 백행기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회원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 가능성을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타진한 뒤 1년 만에 승인을 얻어냈음.
 - 이어 연합회 관계자들과 이산가족들을 설득하고 북한 현지의 가족 생사 확인을 거쳐 현실화시키기까지 꼭 1년이 더 걸려 최근 만남이 성사되었음.
 - 백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우선은 서신 교환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 실제 상봉에 나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음.
 - '북가주 5도민 연합회'는 오는 13일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번 가족 상봉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 "이산가족 해결위해 북한에 줄수 있는것 적극 고려"(12/7,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5·24조치 해제 등

-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밝힘.
-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의 시급성을 지적했음.
 -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선 "북한이 거부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승인해 왔다"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감귤 지원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음.

5. 남북자

- 특이 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NGO, 북 결핵 환자 태양열 조명 지원(12/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대북지원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은 1일 올해부터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태양열 조명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이 기구는 일몰 후에도 환자와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까지 총 60개의 태양광 조명 시설을 결핵 환자들이 수용된 병원과 보건 시설에 설치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태양광 조명은 이 기구가 현재 지원 중인 황해북도와 개성시, 그리고 평양의 결핵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과 보건 시설 28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 WFP "11월 북 110만명 식량지원"(12/4,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110만 명의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북한 주민에 전달된 식량은 약 2,850톤으로 한 달 전인 지난 10월 110만 명에게 2,850톤이 제공된 것과 같은 규모를 유지해, 올해 들어 가장 저조했던 지난 6월에 유엔의 식량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이 약 6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음.
 - 실케 버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예산 부족으로 북한 어린이에 대한 영양강화과자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사회의 기부가 늘면서 지원대상인 북한 주민 110만 명이 모두 유엔의 식량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분쇄기 40대 지원(12/4, 미국의 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콩우유(두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메주콩 분쇄기 40대를 지원하며, 지난달 초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 수잔 리치 대표는 40대 중 일부는 남포 어린이 식료공장에 보내졌고, 나머지는 추후 방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하는 복합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도 약 250만 포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8. 북한동향

- '오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곳은 남조선'이라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등 거론 '군졸들을 침략야망실현의 도구로, 대포밥으로 여기고 개 취급하는 軍 상층부와 비호두둔하는 역적패당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반인권적인 폭력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비난(11.30, 중앙통신/인권유린이 만연된 남조선 괴뢰들)
- 새누리당의 '北인권법' 제정 추진 등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사기극, 극악한 동족대결광란" 등으로 연일 비난과 '우리(北)가 벌리는 초강경대응전의 기본대상'이라고 위협(12.2, 중앙통신·노동신문/초강경 대응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
 - * '北인권법' 제정 추진 관련, '보안법을 둘러메고 휘두르는 인권유린의 왕초들이 反北 인권타령을 불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12.2, 평양방송/보안법을 둘러메고 무슨 인권타령인가)
- EU(유럽연합) 국가들의 '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동참에 대해 "EU의 영상과 체면에 먹칠을 한 청맹과니 행위"라며 '국제관계에서 EU의 평등과 공정성 원칙 확립 및 대외정책 집행에서 맹종맹동하지 말 것' 주장(12.2, 중앙통신 논평)
 - * 「청맹과니」 :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
 - * 일본의 '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동참에 대해서도 '미국의 反北 인권소동 돌격대로 어불성설'이라며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소년근로봉사대 만행 등)' 폭로 및 "우리(北)의 초강경대응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12.2, 중앙통신·노동신문/주대 없이 놀아대지 말라)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駐韓美軍 대상 '기지촌 성매매'와 '日 성노예 범죄'를 거론 "성노예 범죄국들이며 인권유린 표본국들"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저들의 특급범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역사에 없는 최대의 비화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비난(12.3, 중앙통신/성노예범죄 왕국의 주제넘은 인권소동)

- '日, 北韓인권결의안 지지' 관련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한을 남긴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제 주견도 없이 비굴하게 미국에 맹종 맹동하는 것으로서 지금처럼 분수 없이 처신한다면 국제적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12.3, 중앙통신·노동신문/제 주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 유엔 '北 인권결의안' 통과 관련 EU에 대해 '주견도 속대도 없이 미국의 지휘봉에 놀아난 가련한 허수아비들'이라며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난 유럽동맹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비난(12.4, 노동신문/유럽의 독자성은 어디로 갔는가)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11.20, 北 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비난)을 12월 2일 유엔 총회와 유엔안보리 공식문건 'A/69/616, S/2014/849호'로 배포(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